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제603호

지면안내 03 사회  
'희망고문' 제도 앞에  
무너진 정규직 전환의 꿈

05 기획  
노인의 하루 속 무거운 발걸음

06 학술  
미국 대통령에 도달하기 위한 레이스

08 광고  
제39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등록금에 포함된 실험실습비, 세부 내역 공개는 아직...

### 공개 여부 결정은 트랙·학과(부) 재량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학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자금예산명세서」에는 등록금 지출 항목으로 실험실습비가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이 내는 등록금에는 실험실습비가 포함되는 것이다. 『실험실습비 운영내규』에 따르면 실험실습비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소요경비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본교에서는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험실습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 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측에서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아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해 실험·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충당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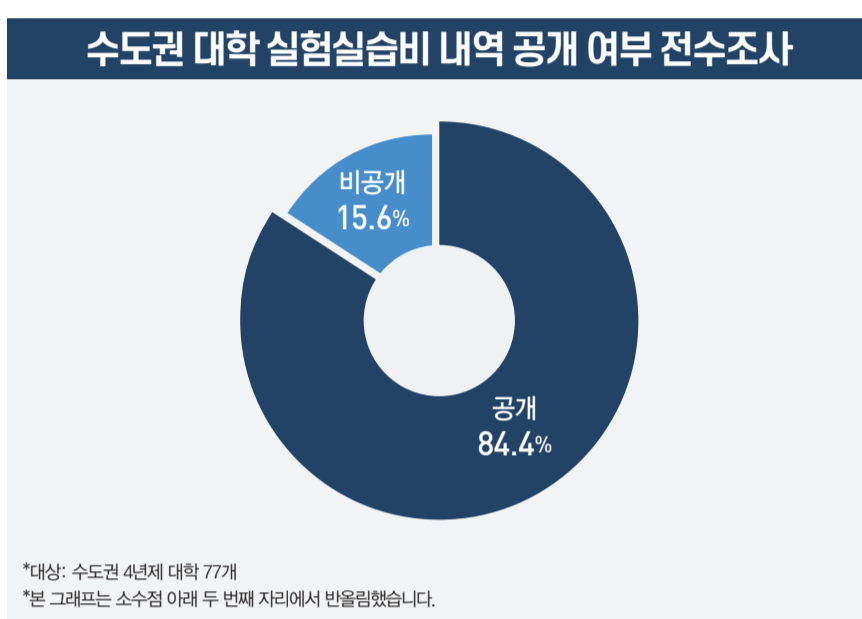
『실험실습비 운영내규』 제5조에 따르면 실험실습비의 사용 범위는 교과운영비와 교육활동비로 구분된다. 교과운영비는 실험기구의 유지보수, 교육용 소모품 구매 등에 사용되며, 교육활동비는 ▲캡스톤디자인 전시회 ▲졸업작품 발표 ▲특강료 등에 쓰인다. 또한 『실험실습비 운영내규』 제9조에 따르면 실험실습비 집행 잔여액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잔여액은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지급 등 대학 교육과 연관되는 직접교육비로 사용된다. 이선훈(예산관리팀) 팀장은 “지난 4월 탐구관 지하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PBL 강의실을 확충하고자 직접교육비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대학본부에서는 학기별 재학생 수를 산출 후 재학생 수에 비례하게 각 학과에 실험실습비를 배정한다. 이후 각 트랙·학과(부)에서 실험실습비로 배정받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이 팀장은 “『실험실습비 운영내규』에 따라 실험실습비 사용에 대한 각 항목이 적절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은 학사지원팀에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단과대학별 각 트랙·학과(부)의 실험실습비는 주로 ▲특강료 ▲수업재료 구매 ▲MT 등에 사용된다. 학과의 특성상 졸업 작품 및 졸업 전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과에서는 실험실습비가 졸업 작품 및 졸업 전시 비용에 사용되기도 한다. 김민성(영미문화학과) 조교는 “특강비와 행사 지원비 등에 실험실습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예지(무역학과) 조교는 “주로 트랙별 연합 MT나 진로 특강, 멘토링 등에 실험실습비가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유정(무용과) 조교는 “졸업 전시나 창작 발표회에 실험실습비가 사용된다”며 “발표회 시 필요한 피아노 반주 등이 그 예시”라고 말했다.

실험실습비는 각 트랙·학과(부)별 특성에 맞게 사용된다. 하지만 실습 형태로 진행된 수업이 적어 실험실습비 사용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연준(컴공 3)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은 “컴퓨터공학부가 진행하는 수업이 대부분 개인 노트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컴퓨터 수업을 제외한 실습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현저히 적어 등록금 납부에 있어서 지원받는다느니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웹공학과(트랙) 2트랙인 김동우(동양화 4) 학생은 “비품을 활용하는 등의 실습 수업이 거의 없다”며 “학과의 커리큘럼 상 실습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험실습비로 지원받는다느니 느낌을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을 맡은 허준영(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실험실습비는 수업에 필요한 라즈베리파이 구매나 클라우드 사용료, 캡스톤 관련 재료 지원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며 “학부의 실험실습비 예산과 사용처에 대해선 학부 측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팀장은 “학과별로 특수성이 있어 실험실습비를 쓰고자 하는 고유한 방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실험실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학생들의 불만을 해결해달라고 말한다.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이 공개된다면 학생들이 갖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선결(기계전자 4) 학생은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예산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철(컴공 2) 학생은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이 공개된다면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컴공 2)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이 제기하는 의견에 맞춰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에 관해 학생 대표자들은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면 학교 측에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서연(ICT 3) 디자인대학 회장은 “디자인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한 비용적 지원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내 등록금에 대비한 혜택을 보장받는 것이 불확실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진다면 학교 측에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요청을 건의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컴공 3) IT공과대학 회장은 “정보가 다른 이를 거쳐 공개가 된다면 그 정보의 투명성에도 불신이 생긴다”며 “학생 대표 입장에서 학교 측에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할 순 있지만 학생회장이 아닌 학교 측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책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소속된 학생 대표자들도 실험실습비 공개에 관한 의견을 내비쳤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실험실습비와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동규(사회과학 4) 총대의장은 “해당 부서에 학생들의 불만이 건의된다면 학교 측에서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실험실습비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학생들이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에 관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측은 각 트랙·학과(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대신 예산관리팀에서 총액자율 예산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산관리팀이 등록금을 모두 징수한 뒤 각 단과대학에 배분하면 단과대학장이 각 트랙·학과(부)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팀장은 “현재 학과별 예산은 단과대학장 주도하에 총액자율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실험실습비 공개는 각 학과 자율성에 맡겼기에 모든 학과에서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트랙·학과(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해당 트랙·학과(부) 사무실에 방문해 실험실습비 열람을 요청한다면 트랙·학과(부) 재량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이 팀장은 “대학본부가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절차가 없어도 트랙·학과(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학생들에게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의 불만으로 실험실습비 사용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면 학교 측에서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대학교 실험실습비 내역 공개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실험실습비 내역을 공개하는 대학은 전체의 84.4%(65개)였다.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교육대학, 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범주이며,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본교는 본교와 상이한 대학으로 처리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2024년 9월 2일 ~ 10월 13일

# ROTC

##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엄청난 장학금!

멋진 기회들!

다양한 활동!

- 단기복무장려금 1200만원
- 매 학기 성과에 따른 장학금
- 매 학기 여우보생 장학금 100만원
- 입영훈련 보급, 학군생활지원금 등

- 일반 병사가 아닌 '소위'로 임관
- 미국 텍사스 A&M대학 리더십 연수
- 한성대학교 기숙사 우선 지원

- 1년마다 국내/해외 전·사적지탐방
- 학군단만의 축제 '무제' 진행
- 타 학군단과의 교류, 선배들과의 만남

문의 02-760-4178 한성대학교 학군단 행정실

한성대 학군단  
모바일 홍보관 >>



모집요강,  
인터넷 접수 >>



# 2학기의 포문을 여는 축제 현장으로

‘2024학년도 2학기 동아리박람회(이하 동아리박람회)’와 ‘개강축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동아리박람회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열렸으며, 5일에는 개강축제가 개최됐다. 두 행사 모두 학내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동아리박람회 행사에서는 34개 동아리의 부스가 학내 곳곳에 배치됐다.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진 동아리를 체험해 보며 서로 다른 취미와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아리박람회가 개최됐다.

각 동아리 부스는 양일 모두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됐다. 동아리연합회 ‘AXIS’를 비롯해 ▲공연예술분과 왕산악, 들불, 탈패, 한음, 낙산극회, NOD, brillante, 4호선마이크, ▲종교분과 CCC, UBF, IVF, 로사리오 ▲학술분과 H-LEP, 셈들, FLASH, DC&M, ASPIRE, TeamODD, TIME, UMC ▲체육분과 HTM, 버팔로, 한검회, 한얼 ▲평면예술분과 P.I.G, 이무기, 영화다솜, 매나니로, 한성타이포 ▲취미봉사분과 유스호텔, 해랑사리우, 별조각, 낭동이 부스를 운영했다. 일부 공연예술분과 동아리의 공연 및 한성대학교 응원가 제창도 진행됐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brillante’는 악기 체험과 클래식 음악 퀴즈 코너를 진행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연주해 볼 수 있었다. 클래식 음악 관련 상식 질문으로 구성된 문제 또한 제공됐다. 김진원(사회과학 2) brillante 회장은 “과거 음악 관련 추억들을 회상하며 코너를 즐기고 간 학생

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기독교 동아리 ‘CCC’는 자신의 불안함을 공유하고 글로 적는 ‘불안이의 집보관소’ 코너를 운영했다. 해당 코너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적어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시은(컴공 3) CCC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적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게임 제작 동아리 ‘TeamODD’에서는 동아리 내에서 개발한 게임을 시연하고 게임의 그래픽 요소를 전시했다. 부스 참여자들은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임 4종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장은수(컴공 4) TeamODD 회장은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아 반응이 좋았다”며 “동아리에서 게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신기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축구 동아리 ‘버팔로’는 축구와 관련된 코너 2종과 퍼즐 게임을 준비했다. 미니 골대에 골을 넣는 코너와 테이블 축구 미니게임이 운영됐으며, 버팔로 로고로 만든 퍼즐을 맞추는 코너도 진행됐다. 안태성(기계전자 3) 버팔로 회장은 “다양한 코너에서 학생들이 재밌게 즐기고 갔다”며 “동아리 홍보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만화 동아리 ‘매나니로’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나 사람을 기억에 의지해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여 홍보하는 코너를 진행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T+



▲‘들불’ 부원들이 잔디광장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탕종 파마산 치즈 베이글’ 기프티콘을 증정했다. 김병찬(AI응용 2) 매나니로 회장은 “그림 실력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재밌게 즐기고 갔다”고 밝혔다.

동물 복지 동아리 ‘낭동이’는 동물 모양 달고나와 동아리 굿즈를 판매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됐다. 김희중(문콘 2) 낭동이 회장은 “특히 굿즈가 많이 팔렸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도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동아리연합회 ‘AXIS’의 부스에서도 여러 행사가 진행됐다. 동아리박람회 팸플릿에 스티커 3개 이상을 받으면 비교과포인트 10pt를, 4개 이상을 받으면 영수증 사진기 촬영 기회를 제공했다. 총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 소원지에 신설을 원하는 동아리를 적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러쉬 기프트 세트(2명) ▲오로라

무드등(3명) ▲LED수정구슬(4명) ▲베쓰밤(5명) ▲메가커피 유니콘메이제이드(블루) 기프티콘(10명)을 지급했다. 행성 카드를 무작위로 뒤집어 짝을 맞추면 봉지 과자를 제공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영희(AI응용 1) 학생은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아리박람회 참가가 동아리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임정아(사회과학 3)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아리박람회가 마무리된 후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강축제가 개최됐다. ▲총학생회 ‘한울’ ▲총대의원회 ‘백연’ ▲학생복지위원회 ‘with’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학생회 ‘INTRO’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청춘’ ▲디자인대학 학생회 ‘FOCUS’ ▲IT공과대학 학생회 ‘공명’ ▲창의융합대학 학생회 ‘F’ERE’가 부스를 운영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총학생회 주최 행사인 ‘한울 골든벨’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한울 골든벨에서는 사전에 모집한 3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퀴즈쇼를 진행했다. 예선은 OX 문제 형태로 출제됐으며, 중간에 한 차례 패자부활전을 실시했다. 예선을 통과한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선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등장했으며,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어어팟 프로 ▲폴라로이드 카메라 ▲스탠리 텀블러가 증정됐으며, 결과와 관계없이 참가자 전원에게 ‘말고당 3천 원권’이 부여됐다. 한울 골든벨에서 우승한 조서영(무용 3) 학생은 “중간에 탈락했지만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와 우승해 기뻐했다”고 밝혔다.

개강축제에 참여한 진원기(사회과학 2) 학생은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내년에도 행사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문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개강 시기에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고 여유롭게 2학기를 맞이하자는 마음으로 개강축제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2024학년도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 마무리

‘2024학년도 하반기 1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24일 탐구관에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예산안 심의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 개정 ▲컴퓨터공학부(이하 컴공) 부학생회장 해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안건은 ▲중앙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8조 제1항 ▲중앙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제8조 제2항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중운위의 모든 예산안은 재적 대의원 16명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중앙선거시행세칙 안건 중 제8조 제1항은 재적 대의원 17명 중 6명이 반대해 부결됐으며, 제8조 제2항은 재적 대의원 17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한 창의대 선거시행세칙 개정안과 컴공 부학생회장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수 1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날 2024학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총 29,666,880원이 인준됐다.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

이 발생하며,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된 세칙의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학생회 ‘한울’은 총 2,268,000원을 승인 받았다. 예산안 세부 항목에는 ▲개강축제 ▲동기야 모여라 ▲한마음 한뜻 봉사활동 ▲프린터 대여비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백연’의 예산은 총 5,095,750원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총선거 ▲개강축제 ▲우수 대의원 선정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복지위원회 ‘with’의 예산으로 총 3,675,000원이 승인됐다. 이는 ▲대여사업 ▲중간 간식 사업 ▲기말 간식 사업 ▲개강축제 ▲기타 사업 ▲기타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동아리연합회 ‘AXIS’는 총 1,665,720원을 인준받았다. 예산은 ▲동아리박람회 ▲동

아리연합회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INTRO’이 승인받은 금액은 총 2,918,640원이다. ▲MT ▲기존 상주 사업 유지 및 보수 ▲개강축제 ▲칭찬장려 프로그램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청춘’의 예산은 총 3,481,970원이다. ▲E-sports 대회 ▲신문스크랩 경연대회 ▲중간고사 종료 후 격려 이벤트 ▲스포츠 경기단체관람 ▲네이버 카페 참여 이벤트 ▲개강축제 ▲사회과학대학 연합MT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디자인대학 학생회 ‘FOCUS’의 예산은 총 3,082,120원으로 책정됐다. ▲물품 대여 사업 보수 ▲프린트 대여 사업 보수 ▲디자인대학 연합 MT ▲디자인 공모전 ▲개강축제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안이다.

IT공과대학 ‘공명’은 총 4,324,710원을 인준받았다. 예산안 내 항목에는 ▲공대 MT ▲개강축제 ▲공대 체전 ▲프린트 대여사업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이 있다.

창의대 ‘F’ERE’는 총 3,154,970원을 예산으로 승인받았다. 세부 항목은 ▲개강축제 ▲창용 MT ▲창용체전 ▲창용인의 밤 ▲문화의 날 ▲창용멘토링 우수팀 ▲창용소모임 지원 ▲피어나라, 디오 ▲사업 홍보용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총대는 중앙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1항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누적 평점 1.88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으나 재적 대의원 17명 중 3분의 2 이상인 12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중앙선거시행세칙 제8조 제2항은 개정이 이뤄졌다.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총대 정·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은 제1

트랙이 속한 학과(부)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총대 정·부위원장,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은 제1트랙이 달라야 한다고 개정됐다. 사과대의 경우 단과대학 내의 학과(부)가 사회과학부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적 대의원 수 17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창의대 내에 소속 학과(부)가 추가됨에 따라 창의대 선거시행세칙 제3조 제3항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이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신설된 융합보안학과와 미래모빌리티학과를 반영한 결과다.

컴공 부학생회장은 해임됐다. 학생회칙 제60조 제3항에서 학과(부) 학생회장은 임기기간 중 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컴공 부학생회장이 임기 중 1, 2트랙을 모두 산업시스템공학부으로 변경해 규정을 위배했다. 해임은 규정 위배에 대한 징계로 취해진 조치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스쿨버스 추가 도입

현재 본교에는 25인승 스쿨버스 2대와 외부 업체를 통해 임대 계약한 25인승 스쿨버스 1대가 있다. 외부 업체를 통해 임대 계약한 스쿨버스 1대는 2학기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중 추가로 구입한 신규 스쿨버스 1대가 도입된다. 기존 25인승 스쿨버스 2대는 노후화로 인해 내년 1월 신규 구매 스쿨버스 1대로 교체된다.

현재 동시간대에 운행하는 스쿨버스는



▲임대 계약한 25인승 스쿨버스의 외관

임대 계약 스쿨버스 1대와 기존 스쿨버스 중 1대로 총 2대이다. 기존 2대의 스쿨버스는 차량 사용 연수 기간 9년이 지나 안전상의 이유로 장시간 운행이 불가해 2대가 번갈아가며 운행되고 있다.

대학본부는 신규 구매 스쿨버스가 납품되기까지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스쿨버스 1대를 임대 계약했다고 밝혔다. 임대 계약 스쿨버스는 25인승으로, 올해 8월 전세버스 대절 기업인 ‘온버스’를 통해 1년간 임차한다. 임대 계약 스쿨버스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잡이가 부착돼 있지 않다. 또, 외관에 신규 구매 스쿨버스와 동일하게 상상부기 등 본교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들어간 디자인이 삽입됐다. 최민이(총무인사팀) 팀장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핀 후 임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만약 연장하지 않는다면 스쿨버스 확충에 대한 다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

고 설명했다.

신규 구매 스쿨버스는 23인승으로 기존 스쿨버스와는 다르게 내부에 손잡이가 비치된다. 최 팀장은 “학생들이 많이 건의했던 스쿨버스 손잡이 부착을 신규 구매 스쿨버스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25인승 이상의 버스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대학본부는 본교의 통학 구조상 45인승 버스는 운행이 어려우며, 신청성북02와 동일한 34인승 버스의 경우 전기버스만 생산되고 있어 도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과거 45인승 버스를 운행했었지만 교내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정문 회전로 구간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교에서 34인승 전기버스를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기버스 역시 도입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구)출판부 건물 철거 본교의 부속 건물인 (구)출판부 건물이 오는 11월 중 철거 예정이다. 해당 건물은 본교 우촌관 지하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한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구간에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구)출판부 건물은 2021년 4월 진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안전 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C등급 판정을 받으면 건물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데, 이때 대학본부는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 공사는 행정절차를 밟은 후 2주기량 소요될 예정이다. 건물 철거 후 공터에는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며 이후 신속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학본부 측은 철거 기간 중 발생할 소음 및 안전 문제에 관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도영(자산관리팀) 부팀장은 “철거 공사 시 약간의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희망고문’ 제도 앞에 무너진 정규직 전환의 꿈

하반기 채용 기간이 다가오며 많은 청년이 다양한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인턴을 거쳐 기업에서의 업무를 미리 체험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존재한다. 인턴제도는 기업의 인재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에 대한 비판이 생겨나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내와 과정이 불투명해 청년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낭비하는 ‘희망고문’ 제도라는 지적이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갖는 인턴으로, 기업이 인턴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공고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연계형 인턴 공고 수는 19,266건으로 5년 전보다 약 3,500건 증가했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나 회사적응력 등을 보기 위해 단기간 고용해보고, 정식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율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채용 공고 사이트 잡코리아의 557개 채용 공고 중 정규직 전환율을 명시한 공고는 9개에 불과했다. 김정호(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환율 정보가 없다면 지원자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는 회사도 존재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주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11개월만 근무시키는 것이다. 직무 경험이 중요해진 만큼 인턴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들은 경력을 쌓고자 울며겨자 먹기로 11개월짜리 인턴에 지원하게 된다. 양승엽(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을 12개월 미만으로 근로시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인턴을 단순한 잡무를 수행하는 일시적·소모적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업무나 일상생활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과 직결돼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턴끼리의 경쟁에서 뒤쳐져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시 곧바로 근무하던 기업에서 벗어나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3개월간 근무한 김유현(31) 씨는 “식사나 걸음걸이 등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지속적인 불안감이 업무 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 수료자들에게 기존에 공시한 기간 내 정규직 전환 인원을 공시하지 않는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모 기업에서는 당초 2분기 내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공시했지만 끝내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8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취업공백기간이 길어져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한 노동자에게 인턴 기간 동안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한 330명의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인턴에 대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에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시 정규직 전환율을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절차법에 정규직 전환율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인턴들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채용절차법에서 정규직 전환율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점이



구직자들에게 취업할 곳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인턴을 11개월만 고용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 의도가 거론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1년을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인턴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용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송연창(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인턴들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경쟁 심리와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구직 활동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채용연계형 인턴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인턴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건강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한다. 양 부연구위원은 “끊임없이 평가받는다는 인식은 인턴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채용연계형 인턴 수료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정규직 전환 인원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 제8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정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모 기업은 수료자들에게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으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기업이 채용연계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와 인턴을 비교 가능한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용연계형 인턴은 정규직 전환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연계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종·유사한 이상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기업에서 채용연계형 인턴 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채용절차법에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 공시를 통해 지원자들의 정규직 전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고용 불안정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서영(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노무사는 “정규직 전환율이 공시된다면 확실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 지원금의 낭용을 막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턴을 뽑았다고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근무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점언한다. 노 교수는 “채용연계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은 청년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채용연계형 인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보란 및 공개를 통해 기업이 평판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송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채용연계형 인턴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최근 몇 개년 정규직 전환율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턴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인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기업에서 청년들의 노동 착취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로자가 채용연계형 인턴 기간 동안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인턴의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고, 기업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박 노무사는 “채용시장 활성화라는 채용연계형 인턴의 취지에 맞게 인턴의 소모품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명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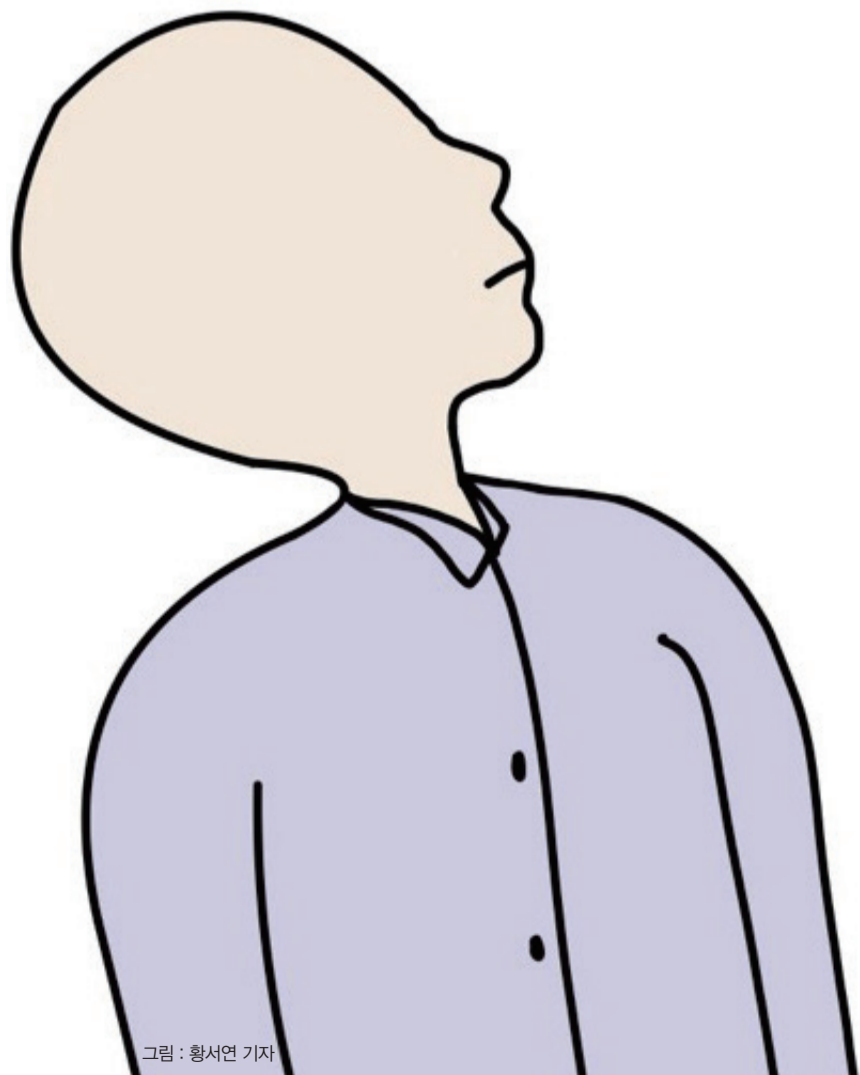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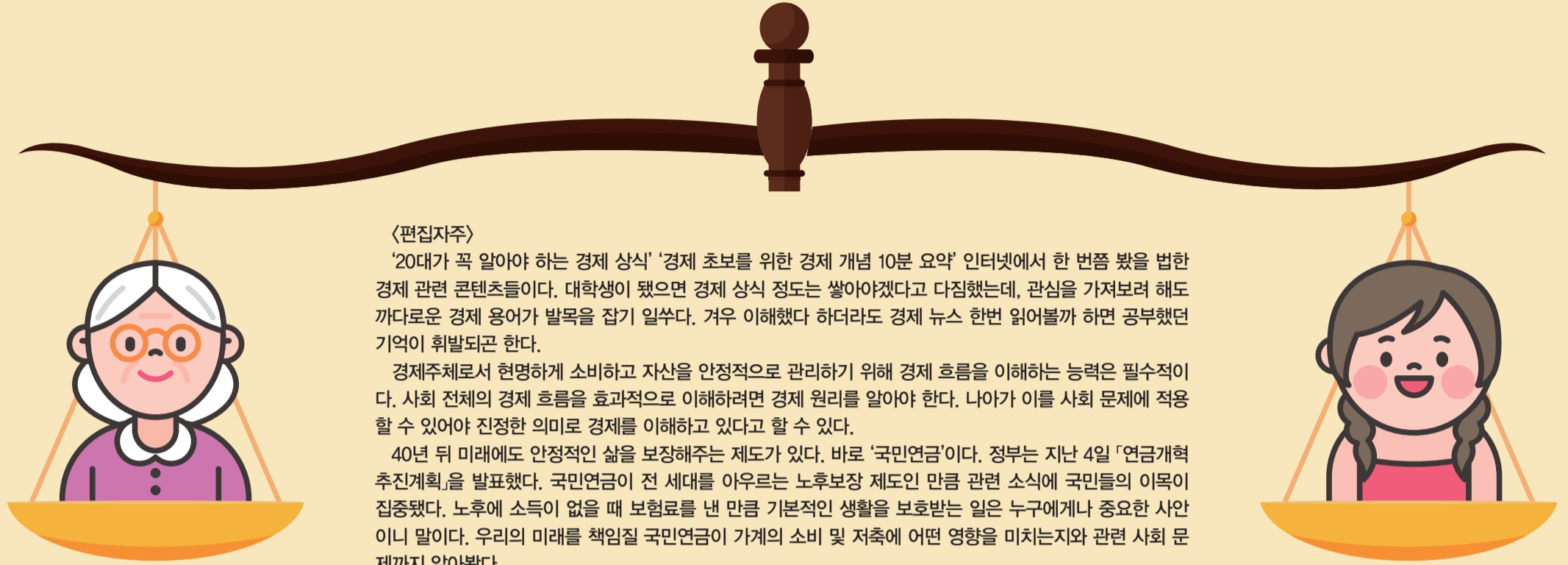


그림 : 황서연 기자



# 국민연금, 세대 간 무게추 맞추기 위해



〈편집자주〉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년 뒤 미래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노후보장 제도인 만큼 관련 소식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낸 만큼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이니 말이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가계의 소비 및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 사회 문 제까지 알아봤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의 투자

'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저축 제도다. 정부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한 후 연령, 납입 기한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다시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즉 국민 노후 보장 의무를 지닌 정부가 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 소득을 변화시켜 가계, 기업 등의 소비와 저축에 변동을 유발한다. 이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로 설명된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국민 소득이 증가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반면 구축효과는 승수효과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음에도 가계가 소비와 저축을 줄여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다.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이 한정적이므로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축소시킨다.

구축효과의 성격을 지닌 재정정책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연금 보험료 납부로 인해 가계의 소득은 감소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고 가계의 저축까지 위축시킨다. 가계가 소비나 사적저축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성호(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 센터장은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높이면 미래의 소비를 보장받아 사적저축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소비와 사적저축 조절 행위는 가계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소득과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생애주기가설'은 가계가 평생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 따라 소비와 저축을 적절히 배분하는 경제 이론이다. 이는 인간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가계가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난다. 특히 국민연금을 보장받는 상황을 살펴보면, 먼 미래에 노후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계는 현재의 소비나 사적저축을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생시키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재의 가치를 높인다고 판단하게 된다. 김형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다수의 사람은 평생 일정한 소비가 유지되기를 원하므로 생애주기가설에 입각해 소득과 소비, 저축의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가계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현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 소득과 소비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을 적용한다. 할인은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자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미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자율을 제외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연 10%(=0.1)라고 가정했을 때 1년 후 1만 1천 원(=10,000×(1+0.1))에 이자율의 역인 할인율(=1/(1+0.1))을 적용시키면 현재 가치는 1만 원(=10,000/(1+0.1))이 된다. 할인율 통해 가계는 실질

적인 소비와 저축을 결정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오랜 기간 발생하는 소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을 적용시켜 불가 등 시간에 따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와 저축은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가계의 연령대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양상을 띤다. 이자율이 적용돼 미래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가계는 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지만 모든 가계가 이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고 장년기에는 소비보다 소득이 크다. 이자율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달라져도 연령대별로 소득과 소비정도가 달라져 할인을 적용해 현재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한 상품에 대해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소비를 줄이지만 장년기에는 소비를 줄이지 않는 선택도 존재한다.

생애주기가설을 국민연금에 적용하면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구하는 '소득대체율'이 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수령할 연금액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소득 변화를 고려해 은퇴 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이후 받을 평균 연금 소득이 책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을 구해 소비, 소득 계획을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문성만(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은퇴 후 어느 정도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저축하고 소득대체율에 따라 생활 유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개인과 사회의 자산배분을 변화시키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유발한다. 같은 세대 내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서로 다른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격차가 축소되는 방식이 활용되기 때문에 세대 내 소득재분배가 이뤄진다. 국민연금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현재의 근로자인 청장년층이 납부한 기금이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며 나타난다.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수령 금액과 연금의 수령 시점이 달라지는 점에 따라 세대 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모든 세대가 연관된 사회 안전망이기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려 한다. 개인의 저축 수준에만 의존할 경우 노인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관리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문 교수는 "은퇴 후 노년기에 자기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사회 불안정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대 간 합의가 선행 과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지속 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망된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비교했을 때 기금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수치다.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1988년부터 2023년까지 5.92%에 머무르는 문제가 있다. 적립된 기금 투자를 통해 적립기금 고갈 시점을 늦춰야 하나, 낮은 기금운용 수익률은 향후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김정현(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는 임시 고용 등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을 일컬으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미룰 수 있다. 소득이 불안정한 불안정 노동자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가입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플랫폼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패널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미래에 지급받는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불균형하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 또한 지적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소득의 9%고, 소득대체율은 40%다. 개인이 얻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현재 매달 9만 원을 내고, 은퇴 후 매달 4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령금액에 비해 납입하는 보험료의 비율이 과하게 낮다는 의미다. 신승룡(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해 큰 연금 급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낮은 수익률 문제는 적립된 기금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사용자, 노동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배분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데, 참여자는 비전문가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과정에서 전문가가 관리를 이루지만, 이마저도 전문가단체나 사용자, 근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돼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전문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안정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기업 등에 속한 임금 근로자에 비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납

입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불안정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보장 상황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에게만 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이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일반 직장인과 달리 불안정 노동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세대 간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제기된다. 현재 청년층인 미래세대가 노후에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료율 관련 논의가 노후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함을 주장하기에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의 추천제가 아닌 기금운용 전문 인력 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과도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으며 장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뛰어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때 자산배분을 이루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민간 투자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에 인력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 노동자가 국민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변동이 큰 불안정 노동자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노인 빈곤 문제에 처하며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기에 불안정 노동자 또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 소득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된 기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을 취한다. 보험료 지급에 따라 적립금이 소진되면, 미래세대가 지불한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고 즉시 부모세대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시점은 현재의 미래세대, 청년층이 노년층이 됐을 때로 전망된다. 결국 현재의 청년층 또한 그들의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보영(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의 합의로 이뤄지는 제도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세대 간 속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 노인의 하루 속 무거운 발걸음



〈편집자주〉

늘어가는 대한민국.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천여 명으로 619만 7천여 명인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고령 사회로 인해 청년과 노인이 접촉할 기회는 늘고 있으나 세대 간 이해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일례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세대 간 폐지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불러일으킬 기회다. 노인의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 노인의 신체를 구현한 노인체험복을 입고 집, 경로당, 마트 등 노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다녀왔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사진 : 황서연 기자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노인생애체험센터를 방문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알 수 없는 옷들로 둘러싸인 마네킹이 보인다. 손에는 장갑이, 팔과 다리에는 부목과 주머니가 달려있다. 뻣뻣해 보이는 조끼와 노란색 앞이 달린 고글도 마네킹을 감싸고 있다. 상주하던 직원이 나와 인사를 건넨다.

인사를 나눈 직원이 마네킹을 둘러싸고 있던 옷을 건넨다. 근육과 관절이 약화된 80대 노인의 신체를 구현한 노인체험복이다. “노인의 몸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노인을 이해하는 데에 물리적, 감정적으로 이해를 돕죠.”

직원의 설명에 맞춰 옷을 하나하나 입는다. 팔과 다리에 플라스틱 부목이 달린 초록색 옷과 딱딱한 철판을 천으로 둘러싼 옷을 입는다. 몸이 뻣뻣해지고 어깨와 허리가 굽는다. 똑바로 서보려 하지만 허리가 굽어 시선이 바닥으로 쏠린다. 손목과 발목에 총 4kg의 모래주머니를 두른다. 팔다리가 무거워져 아래로 처진다. 다음으로 하얀색 면장갑을 낀다. 손에 수분기가 사라지고 촉각이 저하된다. 노인은 손가락 관절도 약화되기에 장갑을 낀 손 위에 뻣뻣한 초록색 천 면장갑을 한 번 더 낀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노인의 시력 저하를 구현한 노란색 앞의 고글도 착용한다. 고글을 쓰니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듯 침침하다. 시야도 좁아져 옆에서 있던 직원의 모습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몸이 됐다.

## 안락하지 않은 집

노인생애체험센터에 마련된 집을 구현한 체험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한다. 거실에 소파가 보인다. 소파에 앉기 위해 등을 돌린다. 다리를 조금 구부리니 관절이 뻣뻣해 힘이 빠진다. 풀썩 주저앉는다. 갑자기 앉으니 허리가 저러 탄식이 절로 나온다.

목이 탄다.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향한다. 냉장고에 있는 작은 음료를 꺼낸다. 한 손에 들어오는 음료병이 미끄러워 당장이라도 놓칠 것 같다. 다른 손을 들어 아래를 병 아래를 받치고 병뚜껑을 돌린다. 손이 미끄러진다. 손이 떨릴 정도로 뚜껑을 세계 쥐고 돌린다. 그제야 뚜껑이 열린다.

집에서 생활한 지 30분, 온몸이 빠근하다. 방으로 들어가 난간이 달린 침대에 눕는다. 똑바로 누우니 불편한 관절 탓에 호흡이 고르지 않다. 왼쪽으로 몸을 돌린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하고 침대에 앉는다. 침대에 걸터앉으니 발이 공중에 뜬다. 한 발을 조심스레 내딛자 걸터앉은 엉덩이가 서서히 미끄러진다. 내딛은 한쪽 다리에만 하중이 실리면서 다리가 무게를 버티지 못해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급하게 손을 뻗어 침대 난간을 잡는다. 관절이 약한 손은 난간을 꼭 잡지도 못하고 미끄러진다.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반대쪽 다리도 빠르게 내딛는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앞으로 넘어졌을 것이다.

밖으로 나가려 한다. 방을 나가 거실을 거쳐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을 신기 위해 벽에 손을 짚고 발을 신발 안에 집어넣는다. 허리를 굽혀 신발 끈을 정리하는데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몸 전체가 흔들린다. 몸을 고정시키려 벽에 몸을 기대고 나서야 안정적으로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동근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 동근 문손잡이를 꼭 짤 수 없다. 손잡이를 더욱 세게 잡고 손잡이를 돌리지만 열리지 않고 덜컥 소리만 울린다. 한 손으로 문손잡이를 세계 쥐고 다른 손을 포개 손바닥 아래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손잡이를 돌린다. 손바닥까지 저릿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문은 열렸다.

## 위험이 도사리는 주택가

노인이 주로 일상을 보내는 공간을 따라가기 위해 낙산공원 언덕 아래에 위치한 중로구 창신2동 경로당으로 향한다.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낙산공원을 향해 걷는다. 가파른 언덕이 800m가량 이어진다. 성인 기준으로 걸어서 가면 13분이지만, 노인의 몸이 된 기자는 25분이 소요됐다. 언덕을 걷기 시작한 지 10분, 꼬리뼈가 아프고 어깨가 말려 목까지 빠근하다. 걷는 도중 잠시 서서 허리를 뒤로 젖히니 앞으로 떨어지던 땀이 뒤로 흐른다.

낙산성곽길에 도착하니 성곽 아래 주택가로 들어서는 계단이 보인다. 아래로 보이는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다. 계단은 100m가량 이어진다. 계단 중간에 있는 난간을 잡는다. 허리가 굽으니 무게가 아래로 더욱 쏠린다. 몸을 사선으로 돌려 바닥을 보고 지팡이로 균형을 잡으며 한 칸씩 내려간다. 내려가는 도중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켜줄 수 없다. 난간에서 손을 떼면 몸이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제자리에 멈춰 서서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뒤에서 들리기를 기다린다. 다시 발걸음을 땀다. 이번엔 계단 난간이 없다. 허공에서 손이 허우적거릴 뿐이다. 계단 난간이 끊어져 있는 것이다. 순간 막막한 심정과 함께 손에 땀을 쥘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세 걸음만 가면 난간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지팡이를 고쳐 쥘다. 조심스레 난간을 잡고 걸음을 옮긴다. 계단 끝까지 내려갈 동안 난간이 3번 더 끊겨 있었다.

낙산성곽길을 따라 즐비한 주택가, 창신길에 들어선다. 내리막길이 약 471m 계속되는 곳으로 일반 성인의 걸음을 기준으로 10분이 걸린다. 노인이 된 기자는 20분이 소요된다. 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걸으니 몸의 무게가 앞으로 쏠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길가에 화분, 쓰레기 등의 장애물이 보인다. 장애물을 피하려고 도로 쪽으로 옮겨 걷자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길가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보고 걸으니 오토바이가 달리는 방향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경적으로 오토바이 위치를 가늠한다. 예상한 것보다 가까워서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놀라 몸이 굳는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 멈춰 섰다 출발하기를 반복한다.

창신2동 경로당이 보인다.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경로당에 도착하기까지 성인 평균 보행 속도로 21분이 소요된다. 노인이 된 기자는 총 45분이 걸렸다.

## 다시 걸음을 옮기며

오후 5시.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다. 경로당을 나선다. 내려왔던 길을 다시 올라간다. 고개를 들어 언덕을 보니 갈 길이 멀어 막막하다. 언덕을 오르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한다. 뻣뻣한 관절을 억지로 움직이니 무릎이 아프다. 호흡이 가빠지지만 천천히, 계속해서 걷는다.

어느새 도로는 어두워져 가로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시력이 저하된 탓에 거리는 어둡게 보인다. 이제 지팡이를 쥘 힘도 없다. 허리도 더욱 굽어간다. 자연스럽게 바닥의 보도블록에 시선이 머물며 천천히 발을 옮길 뿐이다. 문득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또 한 명의 노인이 보인다. 기자와 같은 자세대.

노인의 일상은 느릿한 걸음으로 조용히 이뤄진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분주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할 깊은 고단함이 있다. 오늘도 노인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다급히 흘러간다.



▲기자가 음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중이다.



▲노인체험복을 입고 기자가 침대를 내려간다.



▲길에서 차 앞을 위태롭게 지나간다.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기자

# 미국 대통령에 도달하기 위한 레이스

〈편집자주〉

‘해리스냐? 트럼프냐?’ 오는 11월 5일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하 미국 대선) 결과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언론에서도 미국 대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 관련 기사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2016년 미국 대선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전체 유권자에게 더 많은 득표를 얻었음에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며 트럼프에 패배한 바 있다. 대체 선거인단은 무엇이며, 힐러리는 왜 많은 득표를 얻었음에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일까.

30여 일 뒤 서막을 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본지에서는 단순히 기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미국 대선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파헤쳐 본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미국은 선거 제도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이용한 일종의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우리나라의 직선제와 달리, 미국은 유권자가 뽑은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먼저 유권자가 선거 대리인의 역할을 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복식 선거의 방식인 셈이다.

다만 이 독특한 선거 제도는 직선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권자도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용지에 적힌 대선 후보 중 한 명에게 투표하기 때문이다. 임성호(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유권자의 투표로 각 주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는 해당 주에 할당된 수만큼의 선거인을 상징적으로 지정한 후 그들이 투표 시 후보 자신에게 표를 던지게 한다는 점에서 간선제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도 선출된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이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다. 부통령은 미국 국가 안전보장회의의 일원이면서, 상원(上院)의 장 등을 겸임한다. 부통령에게 별다른 역할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 승계 1순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하긴 어렵다. 해리스도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부통령이다. 이준환(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로 자신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한다”고 말했다.

대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내 경선에서도 미국은 선거인단과 동일하게 ‘대의원’을 선출한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 대신 투표할 대의원을 뽑으면, 이들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배정된다.

이후 선출된 대의원들이 전당 대회에서 각 당의 후보를 확정한다.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방식이 활용된다.

코커스는 정당이 실시하는 경선으로, 지역 당원들이 한곳에 모여 토론 등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전체 대의원의 30%가량이 코커스를 통해 결정된다. 여러 코커스 중 아이오와에서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가 큰 관심을 받

는다. 아이오와가 작은 수에 속하지만, 미국에서 열리는 첫 경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열리는 다른 코커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코커스는 해당 지역 정당의 핵심 지도자나 당원들이 모여서 유세와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가 실시하는 경선으로, 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 프라이머리’와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프라이머리’로 나뉜다. 프라이머리는 전체 대의원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코커스에 비해 프라이머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코커스에 비해 개방적이고, 당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작은 주에서도 민의를 반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상용(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를 더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프라이머리 방식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이뤄진다.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이는 각 주에 2명씩 할당된 상원의원 100명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배정된 하원(下院) 의원 435명, 그리고 워싱턴 DC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인 3명을 더한 값이다. 워싱턴 DC는 주가 아닌 연방 직속 구역이므로 상·하원 의원이 배정되지 않으며, 선거인단 또한 할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DC가 대통령 선거권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3명의 선거인단을 배정받게 됐다. 이 교수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워싱턴 DC에 대통령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운동이 확산되며 워싱턴 DC가 선거인단을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주마다 배정되는 선거인단에는 ‘Winner-Take-All’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승자독식 제도가 활용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그 주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이 모두 가져간다. 예를 들어 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어느 주에서 A 당이 51%, B 당이 49%를 득표했다면 해당 주의 선거인단 5명은 A당이 독점하게 된다.

대개 미국 대선의 결과는 11월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거인들은 12월 17일에 자신이 투표하기로 약속한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나, 각 정당은 선거인들이 다른 후보에 투표하는 행위인 ‘배신 투표’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충성 당원들을 선거인으로 공천한다. 때문에 11월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가 엄밀히 말해 선거인단 선거임에도 여기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만 확보하면 승리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러한 독특한 선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간선제를 명시한 미국 헌법을 고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을 수정하려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후 38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좌초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미국 헌법이 제정된 1789년부터 지금까지 헌법이 개정된 경우는 15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간선제의 실질적인 이점도 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약 3,954만 명,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인 와이오밍주는 58만 명으로 약 70배의 차이를 보인다. 만약 미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다면, 후보자들은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 선거 운동을 집중하고 와이오밍주처럼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외면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주에 할당된 선거인은 각각 54명과 3명으로, 둘의 차이는 18배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선제에 비해 대통령 간선제하에서 와이오밍주처럼 인구수가 적은 주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하 교수는 “대통령 간선제는 와이오밍주처럼 인구수가 적은 주도 미 대선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연방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3개 주의 연합으로부터 시작했기에 연방제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요 이념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이 건국될 당시 선거인은 각 주를 대표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간선제가 자리 잡았다.

이번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임 교수는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큰 변화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 등의 수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밝혔다. 이 교수는 “끝까지 선거 결과가 변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삼 학 송 · ‘쉬는 날’ 된 국군의 날, 본질은 ‘휴식’ 아냐

10월 1일이 휴일로 전환되면서 연휴 기간이 늘어났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올해 국군의 날은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운영되던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다시금 휴일로 지정됐다. 대통령실은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다. 국군의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휴일이 하루 더 생겼다.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실제로 계획에 없던 휴일이 하루 늘어나 학사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져 불만을 토로하거나 정상 근무를 할 예정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과거에도 진행됐다. 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어주거나 주말에 공휴일이 지정됐을 경우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모두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전환한 것으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었다.

이번에도 온통 ‘연휴에만 관심이 쏠린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조치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난 것으로 인식한다. 국가기념일이 휴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정을 우선시한다. 직

장인은 휴일이 공짜로 생겼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일부 자영업자는 매출 하락을 걱정한다. 국군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임시공휴일 전환 목적과는 상반되는 행태다.

국군의 날은 이전에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났던 것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국가기념일이 휴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군의 날에는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시가행진 등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물론 개인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기념일이 갖는 의미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군의 날도 국가기념일로서 제정 목적과 의의를 갖는다. 단순히 휴일로만 취급받는 것이 아닌, 휴일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날이 갖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야 비로소 국가기념일이 갖는 의의가 발현될 수 있을 테다.

지금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몸과 시간을 바쳐 군 복무를 하고 있다. 국군의 날이 휴일로 전환됐지만,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등으로 인해 휴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가기념일, 즉 국군의 날이 갖는 의미를 재고하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것이 군 사기 진작의 시발점이다.

김유성 편집국장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됐다. 홈리스 월드컵은 홈리스(Homeless)들이 사회로 다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주거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 개최된다. 여기서 홈리스란 자립준비청년, 난민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흔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노숙인’이라는 단어와는 구별된다. 주거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홈리스들이 운동장에서 흘린 땀만큼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거 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기자수첩

입학 당시 가졌던 소망이 있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하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학보사라고 생각해 한성대신문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입사 후 5월 노동절을 맞아 수많은 노동자가 모여 있는 시위 현장으로 향한 경험이 있다. 기존에는 노동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필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경험은 더욱 뜻깊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근로기준법』 조차 제대로 지켜

### 변화를 이끄는 나지막한 목소리

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법 테두리 밖의 노동자를 위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였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 공휴일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짓밟는 원인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꼬집었다.

처우 개선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했다. 일정한 평가를 거친 뒤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갖는 채용연계형 인턴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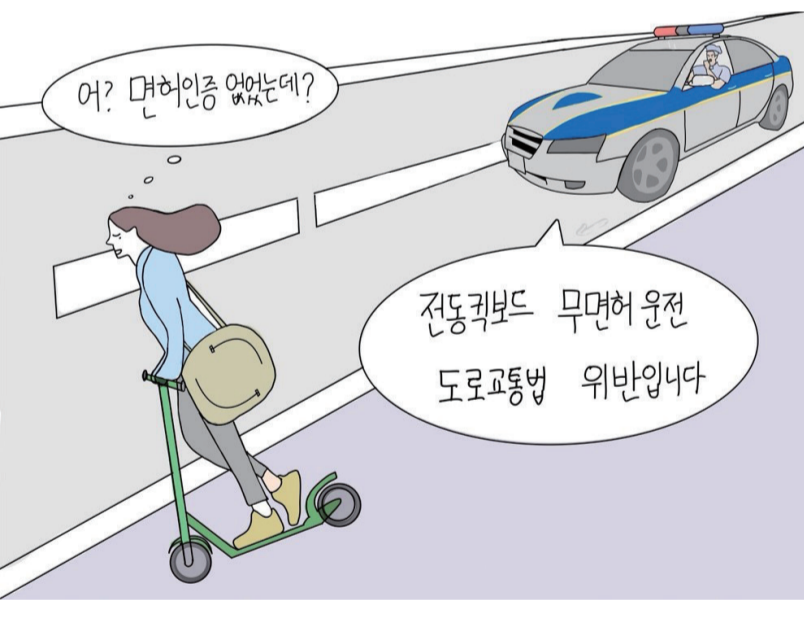
는 이들이었다. 기업에서 인턴을 값싼 노동력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채용연계형 인턴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했다. 현 사회의 미래를 대표하는 ‘청년’ 노동자라는 점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랐다.

필자는 노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앞으로의 노동 환경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 작성된 청년 인턴 기사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해당 기사를 계기로 청년 인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낙산만평

황서연 기자 hsy040623@gmail.com



### ■ 낙산에 올라

21세기에 들어서서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요소가 되었다. 뉴스에서도 흔히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렇듯 PC는 인종, 종교,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과 싸운다는 긍정적 이념 아래 대중화되었고, 그 여파는 우리가 접하는 대중 매체에서 특히 도드라지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와 게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의 행보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있다. 바로 “대중의 반응”이다. 상업적 이익 추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 제작자는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만 한다. PC요소를 적극 채용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중들은 멋있고, 아름다운 미형 캐릭터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

### 소비자의 거부에 직면한 PC

그러나 소년의 ‘콩코드’는 이 눈치싸움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내놓은 플래이어블 캐릭터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대중적인 디자인이 아니었다. 노인 여성, 흑인 여성, 논바이너리, 흑인 트랜스여성, 성별 비공개 등 대다수의 캐릭터가 소수자에 속했고, 미형보다는 개성을 중요시해 똥똥하거나 독특한 스타일을 한 캐릭터들이 많았다. 제작사인 파이어워크는 회사 내 백인 남성 혐오 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초로 PC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AAA급 게임이 시장에 등장했고, 2.5만장의 저조한 판매량으로 인해 2주 후 서비스 종료로 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콩코드의 참패가 현 시장에서 PC주의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PC적 요소를 통해 정치적 올바름을 실현

하려고 시도한 매체는 수도 없이 많았으나 ‘콩코드’는 소비자가 허용할 수 있는 심리적 한계치를 넘어버렸다. 대중 매체 속 PC요소 자체를 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즐거움을 최우선시해야 할 대중매체가 제작사의 가치관을 더 위에 둔 순간, 그 매체는 오락거리로서의 가치를 순순히 잃게 된다.

이제 업계는 실패 사례 분석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받아 들게 되었다. 콩코드의 실패 요인을 PC주의가 아닌 게임성의 저조, 높은 가격 등으로 꼽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편견에 사로잡혀 PC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중들”을 부르짖어서는 안 될 것이다. PC주의의 호불호 이전에, 소비자의 욕구 충족이라는 마케팅의 기본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일찬(상상력 1)

### 기자사령

임  
수습기자 임세아(사회과학 3)  
허윤호(인문 1)  
이소연(사회과학 1)

퇴  
정기자 심민섭(T 1)

### 동정란

정경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정 교수는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제1회 심사공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김남용 편집국장 김유성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 의화정

###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저마다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학술적 의미에서 교양이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식견과 태도’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인간, 사회, 자연(우주)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습을 통해서만 답변 가능한 질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본질상 지식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반드시 타자(타인)와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실천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교양교육이란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며 동시에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통합적 자유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교양교육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본질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이라는 기준이다. 본교의 교양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교양교육과목을 유지,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양수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공과목을 쉽게 가르치면 교양수업이 된다는 해묵은 오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전공’이지 교양수업이 아니다. 교양수업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이다. 고유의 목표와 방법론 및 평가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다. 둘째, 취미나 실용기술을 가르치는 백화점이나 문화센터의 강좌들도 교양수업이 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포토샵이나 엑셀을 잘한다고 해서 품격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강의실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대학의 교양수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교양수업에서는 뭘 가르쳐야 하는가? 한 마디로 본교의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하지만 전공교육을 통해서 함양하기 어려운 능력, 즉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과 포용력을 갖춘 창의융합적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본교 교양교육의 목표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능력이자 시대적 화두인 4C(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한성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지는 분명히 정해졌다. 이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신영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 펜 끝에서

# 펼쳐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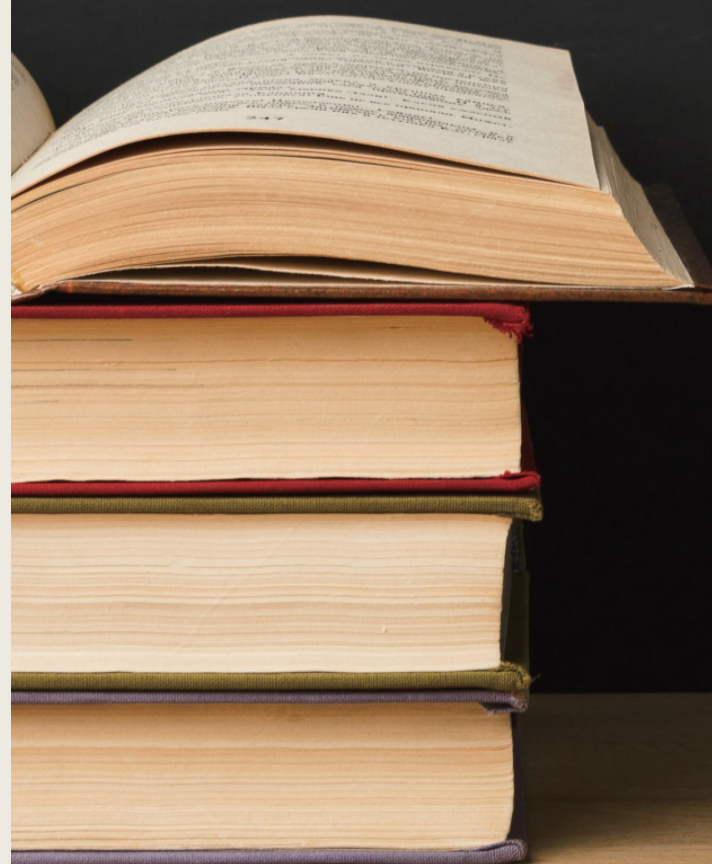


2024/9/23(월)  
~10/25(금) 23:59까지

제39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 문학의

# 한 페 이 지



02)760-4186